

2년 공들인 부산 첫 하천종합계획 '함량 미달'

입력: 2018-07-02 [08:22:05] 수정: 2018-07-02 [13:38:01] 게재: 2018-07-02 [19:37:06]

국가하천 4곳과 지방하천 45곳. 모두 49개에 달하는 부산지역 하천 관리의 지침서가 될 하천정비 종합계획안이 나왔지만 부실한 내용으로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질타를 받고 있다. 정부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 부산시 관련 조직이 재정 비된 이후 총체적인 보완 작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는 '부산 리버(River) 2030(하천정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5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최종안 공개된 '리버 2030'
하천 4개 권역별 사진 정리에
일반론적 문제 나열이 전부
학계·시민단체 "보완 절실"

'리버 2030'은 2015년 본보가 보도한 기획시리즈 '생태하천 20년, 방향 잃은 물길'을 통해 하천 관리의 종합적인 밑그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16년 6월부터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됐다. '리버 2030'은 부산에서 처음 탄생하는 하천 관련 종합계획이어서 큰 기대를 모았지만, 최근 용역 최종안이 공개된 이후 안팎에서 '함량 미달'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체 400여 장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는 건 부산 하천의 문제점을 분석한 부분. 미래 대안을 제시하려면 현재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만 기후변화, 건천화, 복개 등 일반론적인 문제를 5쪽에 걸쳐 나열한 게 전부다. 특히 하천별 문제점을 분석한 게 아니라 4개 권역별로 하천을 묶어 사진 몇 장으로만 정리하고 있다.

중장기 종합계획도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투성이다. 홍수 예방을 위한 습지조성 등 부산 지역 특성과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는가 하면, 하천 유지 용수 확보를 위해 '바닷물 끌어오기(해수 도수)'를 제시하는 등 이미 동천에 일부 적용된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최종안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시 예산 6억 원을 투입해 완성한 종합계획안으로 향후 부산 하천 관리의 '교과서'가 되기엔 여러모로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해당 용역에 자문단으로 참여한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천천네트워크 강호열 사무처장은 "용역 시작 단계부터 함께하며 많은 의견을 내고 풀뿌리환경단체와 간담회도 열었지만, 용역사가 기존에 갖고 있던 큰 틀이 바뀌지 않아 한계를 느꼈다"며 "대천천, 온천천 등 하천별로 관할 공무원이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시민사회와 전문가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해 오는 5일 용역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물관리 일원화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앞둔 만큼 시간을 갖고 총체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대 생명과학과 주지재 교수는 "옛 물길을 복원해야 한다면서 정작 옛 물길을 찾는 작업은 빠져 있다. 꼭지는 다 있는데 안에 내용 없다"며 "49개 하천이 흐르는 물의 도시 부산에 걸맞은 종합적인 하천 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대진 기자 [djrrhee@busan.com](mailto:djrhee@busan.com)

